

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2018년9월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
- 휴회의 건(의장 제의) 8

(10시02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

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에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 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86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상되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9%,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성장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업자들은 눈물짓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왜 절망 속에 살게 합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모하다라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국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사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이 정부 출범 당시에 임기 내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포함해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서 약 54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23조 넘게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고용하면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자제를 해 온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 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중앙직, 지방직 합해서 약 100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약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늘다고 하니까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12%로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 인력들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 여건이 형성될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제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 강국, 복지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 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에 8.9%까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저희 당은 예외 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서 근로유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

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과는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 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과 초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했습니까?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의 노력은 말뿐 아직도 빈손입니다.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하기 어렵다면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줘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 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내겠습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기업인들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해서 기업가 정신을 망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짝어 내듯 유사한 특징을 가졌던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는 다릅니다. 멤버 모두가 작사·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국내파입니다. 지방 출신이 다섯 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믿어야 합니다. 또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 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입니다. 당시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4년이 지났지만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도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 아실 겁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관해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고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해

서 우리 정부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들을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 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만약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다음 주 중에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집중 심사합니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강화해야 할 규제는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도 지켜 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틀 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의 각 당을 방문했습니다. 규제 완화 입법의 통과를 말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000개가 있는데 그중 700개는 규제 관련 법안, 300개는 진흥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해서 규제를 평가하는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우리 국회에 도입하기를 정식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각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강남에 평당 1억 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

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가 90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 원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 비율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평균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놴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는커녕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폭탄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 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순응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더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해 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 신청자격 제한하기로 한 것 아닐 것입니다.

과연 7000만 원이라는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 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또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342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 자격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결국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시중은행이 아니라 제2·제3 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준입니다. 전세보증 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인 대책을 꼭 내놓아야 합니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는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부동산 자금에 대한 대출 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 경기도 등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전에 정리해서 부처 간의 엇박자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공약이 바로 ‘책임 내각 하겠다, 책임총리, 책임장관 하겠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의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 정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은 옆으로 비켜서서 본연의 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의 캠퍼더 인사를 그만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퍼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언급하신 취임사에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켜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 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제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 이것은 문제인 정부의 비검함과 무책임 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여론 뒤에 숨는 책임 회피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가 집권 후에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 대입 정책 공론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대입 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아래에 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다시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는 대신에 공론화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의 등 뒤로, 여론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 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뚝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앞으로의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뒷집지는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 간에 당리당락을 떠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또 변화의 바람이 불면 그것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번 체험하셨을 겁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당의 대표께서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만큼 이제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 내야 합니다. 개헌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 정권만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락을 떠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 입장을 취하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 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또 개헌 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촛불 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지방 분권 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이미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이외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정치 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 가지 못했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 개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는 긴장 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교류,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우리 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시키기 위해서 또 여야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고 북미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에 저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 처리해야지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해서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 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정당

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 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 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 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그 자체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서는 안 되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3 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시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논의는 더더 보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답습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서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활비 폐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 최우선,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안 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 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갖고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나라, 또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바른미래당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김관영 원내대표 아주 썩 잘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문희상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84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종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원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유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균현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양수	이연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완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욱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영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경환(평)
최인호	최창원	추태경	최운애
추혜선	최창원	추태경	추미애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문표
홍영표	홍의철	홍주홍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06인)

강병원	강석진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훈	김중로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인숙	박재호
박정근	박주민	박주선	박찬대
박홍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언석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어기구	엄용수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상현	이석현
이완영	이용주	이원욱	이은재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완	인재근
임이자	장정숙	장석춘	장정숙
장정현	전현희	정갑윤	정동영
정용기	정인화	정춘숙	조승래
조광덕	진선미	최경환(평)	최운애
최운애	홍문표	홍일표	홍일표
정운천	정유섭	정성호	정재호
정성호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유섭	정유섭	정성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황영철	황주홍		

○산회 시 재석 의원(268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金成泰	김성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일규	윤재옥	윤종필	윤준호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현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평)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희

○출장 의원(1인)

이수혁

○청가 의원(5인)

김영주	김진태	이종걸	정양석
조배숙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유인태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국 방 부 장 관	송 영 무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개 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 운 규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정 현 백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중 학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 형 권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이 성 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 병 석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진선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2018. 9. 5.

○의안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 김삼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 김삼화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기선 · 홍일표 · 이종배 · 윤영석 · 유재중 · 박대훈 · 김석기 · 이채익 · 권성동 · 함진규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강창일 · 김상희 · 노웅래 · 신창현 · 안규백 · 안호영 · 오영훈 · 유은혜 · 윤관석 · 윤후덕 · 조정식 의원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심재권 · 이인영 · 송갑석 · 서형수 · 기동민 · 원혜영 · 신창현 · 송옥주 · 전현희 · 노웅래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강효상 · 김광립 · 金成泰 · 김종석 · 김진태 · 문진국 · 박완수 · 백승주 · 송언석 · 송희경 · 신보라 · 윤상직 · 윤종필 · 이만희 · 이언주 · 이장우 · 임이자 · 정유섭 · 최교일 의원 발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심재권 · 심기준 · 이인영 · 송갑석 · 기동민 · 김정우 · 원혜영 · 신창현 · 송옥주 · 박주현 · 전현희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강효상 · 김종석 · 정유섭 · 이언주 · 신보라 · 최교일 · 송언석 · 백승주 · 이만희 · 김광립 · 문진국 · 이장우 · 김진태 · 임이자 · 성일중 · 이명수 · 김학용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신창현 · 위성곤 · 백재현 · 박완수 · 오영훈 · 김정호 · 민홍철 · 이수혁 · 이혁재 · 노웅래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영호 · 박선숙 · 김민기 · 윤후덕 · 윤관석 · 김현권 · 원혜영 · 강창일 · 김병기 · 정춘숙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승희 · 박덕흠 · 신보라 · 김성찬 · 이양수 · 김규환 · 윤영석 · 이완영 · 정태옥 · 나경원 의원 발의)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승희 · 박덕흠 · 신보라 · 김성찬 · 이양수 · 김규환 · 윤영석 · 이완영 · 정태옥 · 나경원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용호 · 천정배 · 이찬열 · 김광수 · 이태규 · 김중회 · 장병완 · 김삼화 · 주승용 · 윤영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찬열 · 윤후덕 · 황주홍 · 권철승 · 김수민 · 하태경 · 정인화 · 위성곤 · 신용현 · 김중로 · 김삼화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강효상 · 정유섭 · 김광립 · 최교일 · 성일중 · 김진태 · 이장우 · 이명수 · 김종석 · 문진국 · 송언석 · 김학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9. 5. 엄용수 · 김광립 · 원유철 · 김승희 · 박명재 · 김기선 · 유기준 · 박덕흠 · 이종명 · 추경호 · 송석준 · 이학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8. 9. 5. 조정식 · 김정우 · 김철민 · 윤영일 · 안호영 · 윤후덕 · 이원욱 · 임종성 · 금태섭 · 정춘숙 · 이용호 · 윤일규 · 김재경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 발의)

(2018. 9. 5. 이은재 · 이철규 · 송희경 · 박명재 · 강석호 · 박덕흠 · 이종배 · 박대훈 · 정유섭 · 추경호 · 김학용 · 최교일 의원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종훈 · 김해영 · 김종대 · 김수민 · 심상정 · 윤소하 · 이채익 · 이상헌 · 추혜선 · 강길부 · 이정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종훈 · 김해영 · 김종대 · 김수민 · 심상정 · 윤소하 · 이채익 · 이상헌 · 추혜선 · 강길부 · 이정미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종훈 · 김해영 · 김종대 · 김수민 · 심상정 · 윤소하 · 이채익 · 이상헌 · 추혜선 · 강길부 · 이정미 의원 발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김종훈 · 김해영 · 김종대 · 김수민 · 심상정 · 윤소하 · 이채익 · 이상헌 · 추혜선 · 강길부 · 이정미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9. 5. 이언주 · 주승용 · 이찬열 · 김중로 ·

이동섭 · 김삼화 · 오세정 · 하태경 · 김수민 · 오제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8. 9. 5. 이언주 · 김수민 · 윤상직 · 김삼화 · 이동섭 · 이찬열 · 이학재 · 김중로 · 김종석 · 강효상 · 추경호 · 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018. 9. 6. 의장 제의)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6일간)